

칼럼

민선 6기 지방자치시대에 바란다



이원중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민선 6기 지방자치시대에 대한 기대가 크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20년이 되었다. 사람으로 보면 성년이다. 그간 축적해 온 다양한 지방자치 경험은 지역 발전의 토대가 된다. 먼저, 지방자치가 발전하면서 지역의 행정 서비스 공급이 공무원 입장에서 수요자인 주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내 고장 살림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 정부 내부의 창조 역량도 중앙 정부 못지않게 성장하였다.

현재 지역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가 경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주요 생활 거점인 지역 도시조차도 인구 감소와 고령화 및 도시 쇠퇴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SOC 건설이나 공공기관 이전, 광역경제권 정책과 같은 물량 위주의 지역 발전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행복에 직결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갖고 정부는 작년 7월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이라는 비전 아래 주민이 행복을 체감할 수 있고 전국 어디서나 높은 수준의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의료 서비스 제공을 골자로 하는 지역 희망(HOPE) 프로젝트를 세웠다.

지역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는 후속 작업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 수단으로 ‘지역행복생활권’ 구성을 추진하였다. 지역행복생활권은 인접한 2개 이상의 시·군이 협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권역으로서 전국적으로 56개가 구성되었다. 중앙 정부는 생활권에서 제안하는 주민 행복에 밀접한 사업에 대하여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지역생활권’이 정착되면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늘어나는 행정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중복 투자 및 과당 경쟁을 방지하고 자원 및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민선 6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행복생활권의 정착과 지역 발전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첫째, 지방 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책임성도 높여야 한다. 특히, 각종 정책과 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일관성 유지, 그리고 지방 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실제 주민이 느끼는 정말 필요한 것,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피고 소통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셋째,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와 주민 간 가교이자 국정 과제 수행의 중요한 동반자이다. 이를 위해 지역발전위원회도 민선 6기 지방 정부가 주민 행복과 지역 희망의 성과를 거두도록 적극 지원하고 노력할 것이다. CERIK